

보도자료	보도일시	2017년 4월 11일(화) 조간
	담당자	천소라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(044-550-4042, sora@kdi.re.kr)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(044-550-4157, kst@kdi.re.kr)
	배포일시	2017년 4월 10일(월) 09:00
	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
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

천소라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
김성태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

본고는 2017년 상반기 『KDI 경제전망』에 수록될 예정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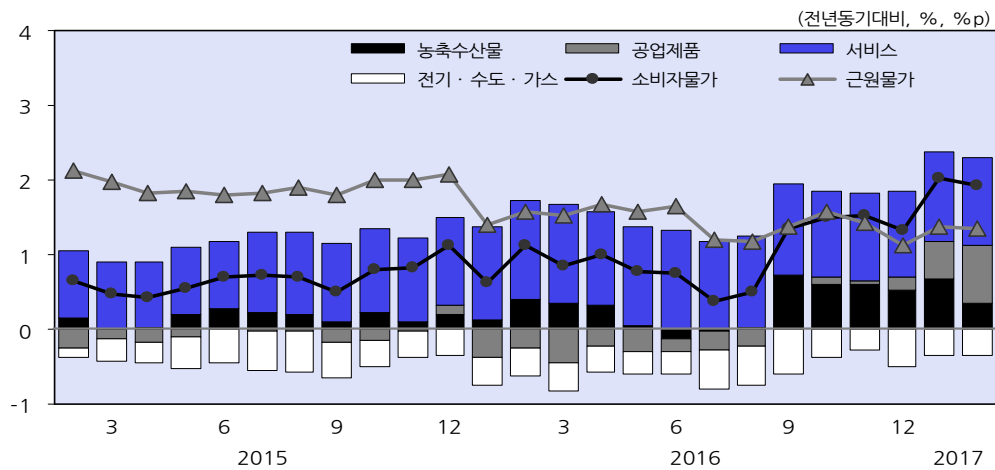
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

연구위원 천소라
연구위원 김성태

1. 문제제기

- 물가상승이 저소득 가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있으나, 이는 실질구매력 관점에서 소득계층별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
 -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목표(2%)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저소득 가계의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
 - 그러나 가계의 생활여건은 물가상승률과 함께 명목소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, 이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실질구매력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

소비자물가 추이 및 부문별 기여도



자료: 통계청; 한국은행.

-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계의 소득분위별 실질 구매력의 변화 및 차이를 물가상승률 및 명목소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,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
 - 물가상승률의 소득분위별 비대칭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, 구매력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

2.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 추이

■ 본고에서는 2003~16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분위별로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을 가중치¹⁾로 설정하여 각각의 물가지수를 계산하고 이를 비교하였음.

●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소비 품목(총 460개)은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나, 개별 품목의 가중치는 소득분위별 지출 비중에 따라 매년 다르게 적용

- 다만, 도시별 가중치는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공식 소비자물가지수 자체와는 차이가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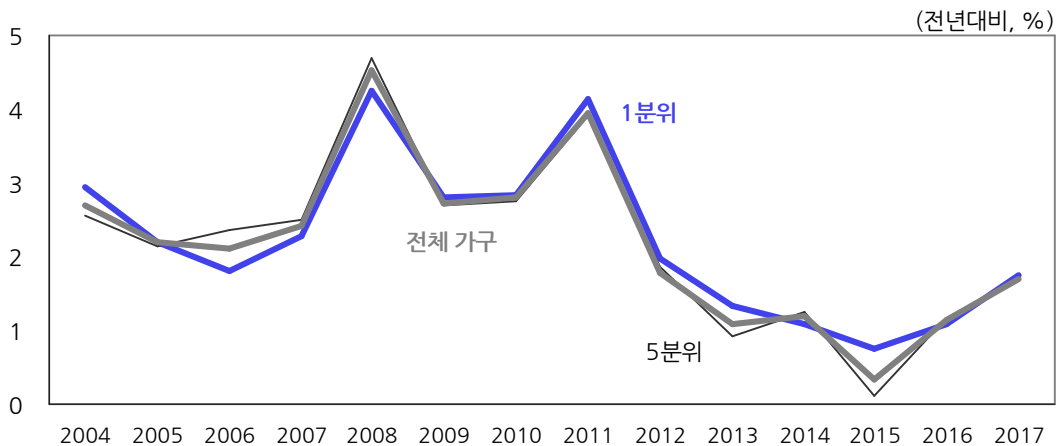
■ 비교 결과, 2003년 이후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.

● 지난 13년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.2%였으며,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각각 2.26%, 2.22%로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임.

- 추가적으로, 핵심 경제활동인구인 30~60세까지의 가구만을 대상으로 비교하는 경우에도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, 시점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나는 경우에도 결과는 동일함.

- 2015년에 일시적으로 소득 5분위의 물가상승률이 소득 1분위에 비해 낮은 것은 유가하락에 따른 교통비 하락의 영향이 소득 5분위에서 크게 나타난 데 기인

소득분위별 연간 물가상승률



주: 1) 2017년 소비자물가의 경우, 1~2월 월평균 지수를 연간 지수로 활용함.

2) 소비자물가(전체 평균)와 통계청 물가지수는 세부 가중치가 상이함에 따라 상승률이 일치하지 않음.

자료: 통계청; 한국은행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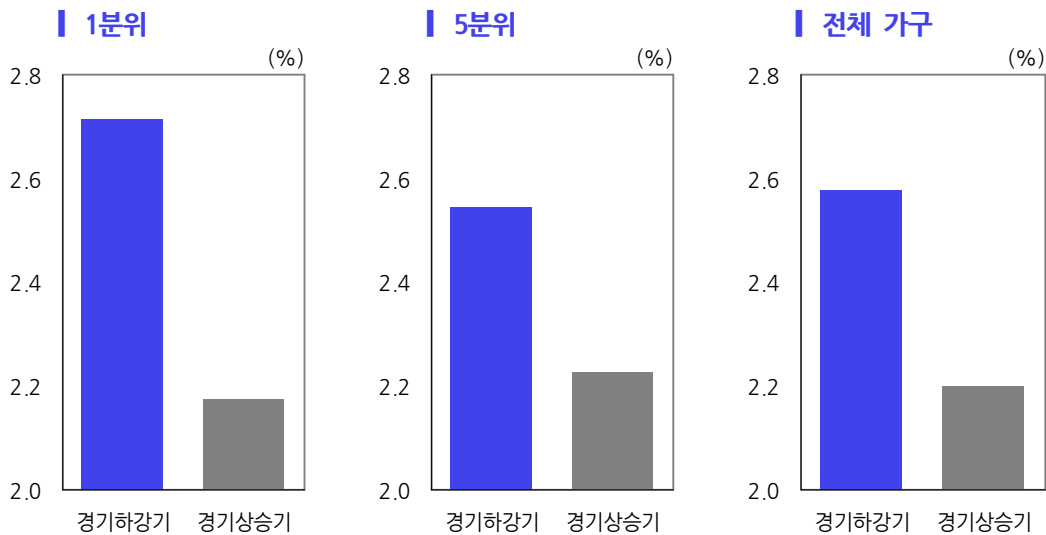
1) 표본가구의 총소비지출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지출 비중.

■ 다만, 경기 국면별로는 경기하강기에 소득 1분위의 물가상승률이 소득 5분위보다 소폭 높았으며, 경기변동에 따른 변동폭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.

● 경기하강기에 1분위의 물가상승률은 연율 기준으로 2.71%를 기록하여 5분위(2.54%)보다 0.17%p 높았으며, 1분위의 경기 하강기와 상승기 간의 평균 상승률 격차(0.54%p)도 5분위(0.32%p)보다 크게 나타남.

● 이는 유동성 제약과 경기하강에 따른 충격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소비활동을 더욱 위축시켰을 가능성

경기 국면별 물가상승률(연율)



자료: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(MDIS), 전국 2인가구 이상.

■ 경기 국면에 따라 저소득층의 체감물가가 더 높을 수는 있으나, 전체 물가상승률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매우 비슷하게 나타남, 가계의 생활여건 변화가 물가상승률 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.

3. 소득분위별 명목소득 및 실질구매력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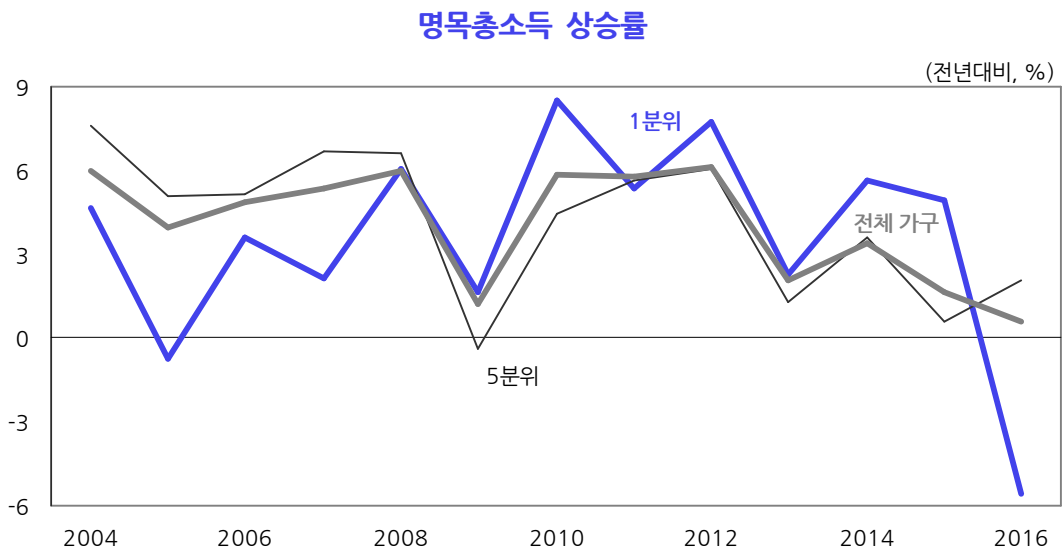
■ 반면, 2003년 이후 소득분위별 명목소득은 1분위 및 5분위에서 각각 연평균 3.5%와 4.2% 증가하여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격차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분석됨.

● 소득분위별 명목소득 격차는 주로 금융위기 이전에 나타난 것으로, 최근에는 소득분위별 명목소득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
- 금융위기 이전(2003~08년) 기간 중 1분위의 연평균 명목소득 증가율(3.1%)은 5분위(6.2%)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으나, 금융위기 이후(2010~16년)에는 1분위(3.3%)와 5분위(3.2%)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

- 한편, 2016년의 경우 1분위(-5.6%)의 명목소득이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감소하면서 소득분위별 소득격차가 재차 확대된 바 있으며, 이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격차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음.

●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으로 비교하는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남.



자료: 통계청; 한국은행.

■ 이에 따라 **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(명목소득/소비자물가)의 격차는 2003년 이후 확대되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음.**

● 2003년 이후 1분위의 실질소득은 연평균 1.20% 증가하였으나, 5분위는 1.90% 증가를 기록하여 매년 0.7%p의 구매력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며, 이는 주로 명목소득 격차에 주로 기인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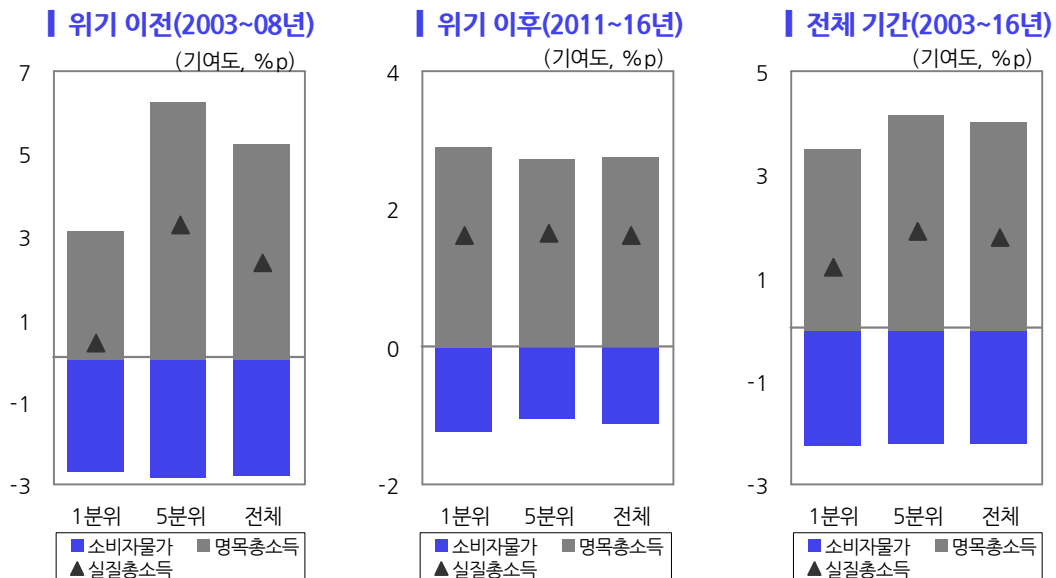
- 이를 전체 기간으로 환산하면, 지난 13년간 1분위와 5분위 간의 실질구매력 격차는 10% 이상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.

- 예컨대, 1분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2003년 123만원에서 2016년 143만원으로 20만원이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, 5분위는 2003년 646만원에서 2016년 825만원으로 179만원이 증가하였음.

● 아울러 이러한 실질구매력의 격차는 주로 금융위기 이전에 확대된 것으로, 금융위기 이후에는 실질소득 상승률이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됨에 따라 그 격차가 더 확대되지는 않고 있음.

- 금융위기 이전(2003~08년) 기간 중 1분위의 실질소득은 연평균 0.41% 증가하는 데 머무른 반면, 5분위는 3.28%를 기록하여 비교적 빠른 속도로 구매력 격차가 확대됨.

- 반면,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2011년 이후의 실질소득은 1분위 및 5분위가 모두 1.63%를 기록하여 소득분위별 유사한 상승률을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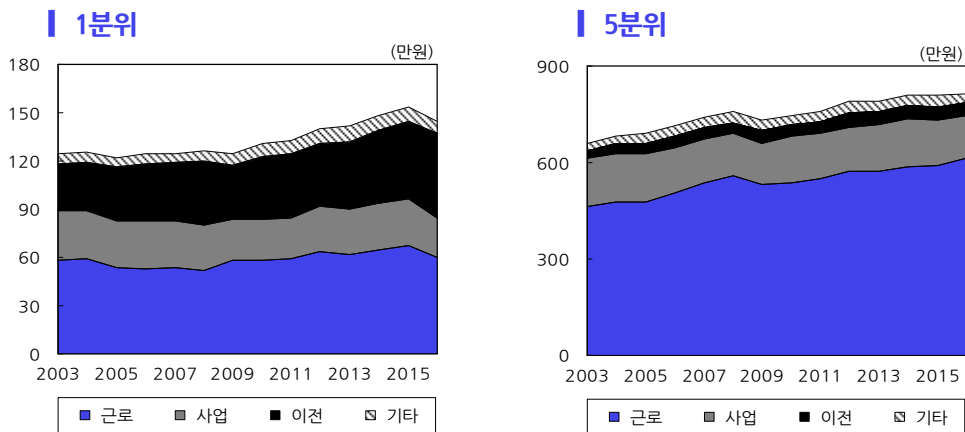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(MDIS), 전국 2인가구 이상.

■ 2003년 이후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의 격차는 1분위의 60대 이상 가구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이 정체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.

- 실질근로소득이 1분위에서는 정체된 반면, 5분위에서는 꾸준히 증가한 것이 구매력 격차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됨.
 - 다만, 금융위기 이후에는 1분위의 이전소득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실질구매력 격차가 확대되지는 않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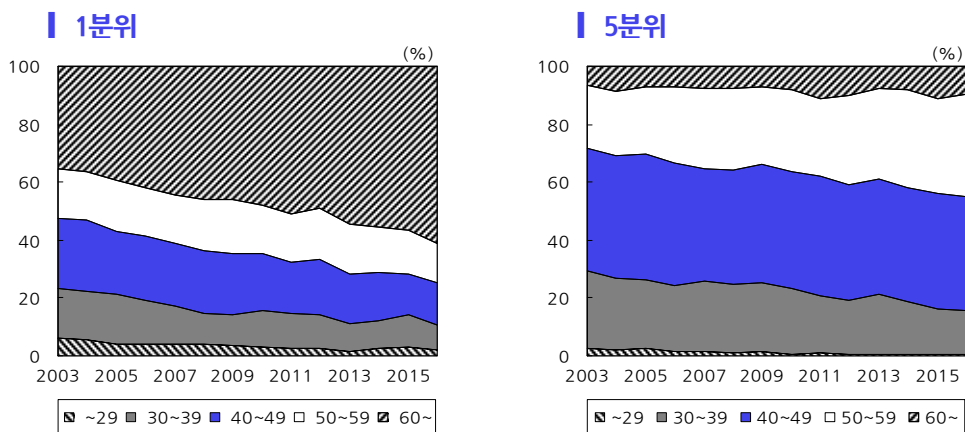
가구소득 유형별 비중



주: 기타 소득은 재산소득 및 비경상소득의 합.

- 은퇴로 인해 노동소득이 감소한 60대 이상 가구 비중의 확대가 1분위 소득 정체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사료됨.

분위별 가구 연령 비중



주: 전체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한 실질총소득 기준.
 자료: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(MDIS), 전국 2인가구 이상.

4. 요약 및 시사점

■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의 격차는 금융위기 이전의 명목소득 증가율 차이에 기인하며, 소비자물가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우 유사한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.

- 2003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연평균 2%대 초반의 상승세를 유지하여, 소득수준에 따른 비대칭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.
- 그러나 소득분위별 명목소득의 격차는 금융위기 이전 기간 중 비교적 큰 폭으로 발생하였으며, 이에 따른 구매력의 차이가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.
 - 특히,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2003년과 비교하여 거의 정체되어 있어, 체감경기를 악화시키고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■ 이러한 결과는 가계의 소비 여력과 실질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**저소득층 중심의 소득개선 정책이 핵심임**을 시사

- 구입빈도가 높은 필수재 가격안정을 위해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정책(예: 기상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국내 공급량 감소를 수입 확대로 보완)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, 체감물가 상승을 근거로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은 오히려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
- 고령층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여건을 개선하여, 소득분위별 구매력 편차를 완화할 필요
 - 근로빈곤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EITC제도를 질적·양적으로 보완하는 가운데, 고령층을 포함한 근로능력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직업 알선 및 훈련 등의 간접적인 지원도 보강할 필요
 -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화하여 소득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.